

	보 도 자 료	작성과	회 계 제 도 과
	2019년 1월 4일(금) 조간 (1. 3. 12:00 이후)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담당자	과 장 김종범 사무관 배기철
		연락처	02-2100-3528 02-2100-3529

행안부,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강력 추진 - 지방재정 신속집행(58.5%), 일자리 · SOC사업 집중 관리 -

- 2019년 행정안전부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,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한다.
- 행정안전부(장관 김부겸)는 올해 상반기에 최근 5년간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대 수준의 목표율 58.5%를 설정*하고, 목표 달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,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.

* ('14) 55.50% → ('15) 56.50% → ('16) 58.00% → ('17) 56.50% → ('18) 57.0%

< 2019년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율 >

전체	특·광역 단체	기초단체	공기업	일자리	SOC 국고보조
58.5%	63.5%	55.5%	56.5%	66.0%	55.0%

- 특히,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큰 일자리 창출, SOC사업(사회 기반 시설 사업) 등에 대해서도 집행 목표율을 설정하고 집중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.
-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액은 지난 해 179조 원 보다 14.5% 늘어난 205조 원 규모이다.

< 2019년 상반기 신속집행 대상액('18.12.27 잠정치, 총계기준) >

구분	계	일반회계	특별회계	기금	공기업	이월액
집행 대상액	205.0조	137.1조	20.3조	1.9조	18.5조	27.2조

□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대책은 다음과 같다.

- 먼저, 1분기 내에 추경을 최대한 앞당겨 확장적 재정 지출을 위해 지방소비세 인상분, 교부세 증가분 미편성액 등 약 10조원+a을 활용, 일자리 및 생활 SOC사업 등에 조기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.
- 광역자치단체 50억 원(기초 30억)이상 사업의 집행 관리를 위해 지방재정 관리시스템(e호조)을 개선,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및 부진단체·부진사업에 대해 「현장점검 특별반」을 운영하여 맞춤형 집행 관리를 강화한다.
- 또한, 긴급입찰 시 소요기간의 최대한 단축 공고, 선금 계약금액의 70% 이내 지급, 적격심사 기간 단축 등 「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지침*」 및 「적극행정 면책제도(감사원)」를 적극 활용한다.

* 모든 대가는 5일 이내→청구일 당일 지급 원칙, 불가피한 경우 적어도 3일 이내 지급, 검사·검수는 14일→7일 이내 완료, 기성대가는 1회 기성 대가 지급 후 30일 마다 지급

- 수시 현장점검 실시, 각종 회의체 등을 활용한 집행독려, 중앙 및 지방 「지방재정신속집행지원단」을 통해 신속집행 현장 점검 및 애로사항을 지원한다.
- 국비보조사업의 신속한 자금 교부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, 아울러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관장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(특교세)도 지원할 방침이다.

□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“상반기 신속집행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나 국민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희망한다.”라고 밝혔다.